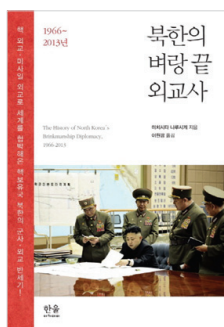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1966~2013년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이 책은 1966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벼랑 끝 외교를 주로 정책목적 달성도(達成度)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서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 책의 주요 결론을 소개하고, 한국이 북한의 벼랑 끝 외교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다룬 뒤, 마지막으로 향후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알아두어야 할 교훈에 대해 논한다.

벼랑 끝 외교의 효과와 한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실시하면 순간 그 현란함에 시선을 빼앗겨 그 효과를 냉정히 평가하는 것을 잊어버리곤 한다.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가 북한에 속았다’, ‘북한이 교묘한 벼랑 끝 외교를 펼쳤다’ 등의 주장이 흘러나온다.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조금 침착하게 기본으로 돌아가 북한의 행동을 되돌아보면 어떨까? 크라우제비츠를 인용할 것까지도 없이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고 군사력은 정책의 수단이다. 즉, 북한의 벼랑 끝 외교도 ‘이를 통해 북한의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북한은 1993년 NPT를 탈퇴함으로써 핵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1994년 제

네바합의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중유 제공, 경수로 건설, 북미관계 개선의 약속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22년이 지난 현재 중유 공급과 경수로 건설은 중단되었고 북미관계 정상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20년 이상에 걸친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한 나라가 ‘교묘한 벼랑 끝 외교’를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1950~60년대 북한의 정책 목표는 매우 적대적이었지만 70년대를 기점으로 점차 협력적인 요소가 나타났으며 90년대 이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 생존을 추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군사행동 역사를 살펴보면 그 정책 목표는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1950~60년대 북한의 정책 목표는 공세적이고 야심에 차 있었다. 북한은 1950년에 벼랑 끝 외교가 아닌 전면 전쟁을 통해 한반도의 무력 통일을 시도했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대규모 게릴라전을 통해 한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청와대를 습격하여 한국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푸에블로호 사건과 EC-121 격추사건을 일으킨 목적은 미국의 첩보 활동을 저지하는 동시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미 양국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것이었다.

1970년대 북한의 정책 목표는 60년대만큼 야심차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공세적이었다. 북한은 1973년부터 서해에서 활발한 해·공군 활동을 전개하여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르기도 하였다. 1976년에 일으킨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자국의 지지를 확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고자 했던 사건이다. 1970년과 1974년에는 이보다 더한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후 북한의 정책 목표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1980년대 북한은 아웅산 테러, 김포공항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에서 테러를 잇따라 감행하는 등 매우 공격

적인 행동을 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우려와 조바심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한국이 고도성장을 이루어 가면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한국에 뒤쳐져 갔다. 1983년 아웅산 테러의 배경이 된 전두환의 버마 방문은 한국이 동남아에 영향력을 늘려 가고 있다는 상징이었다.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은 승무원과 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잔인한 사건이었지만 그 목적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화려한 데뷔로 장식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수세적 목적이었다. 북한은 한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을 타파하고 반격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시도가 북한의 입장을 더욱 악화 시키게 되었고 북한은 마침내 한국에 대해 수세적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1993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핵·미사일 개발의 정책 목표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통해 체제 유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한반도 분단의 제도화, 경제 지원 획득 등 핵·미사일 실험이 주는 공격적인 이미지와 대조적인 매우 제한적이고 수세적인 목표이다.

더욱이 북한의 정책 초기 목표는 매우 적대적이었지만 70년대를 기점으로 점차 협력적인 요소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북한은 1974년에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해졌고 북한은 보다 명확한 형태로 미국·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다만 70년대와 90년대의 (정책 목표에는) 다른 점도 있었다. 70년대에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현상 변경, 즉 주한미군 철수 등을 추구했던 반면, 90년대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현상 유지, 즉 자국의 체제 생존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벼랑 끝 외교의 유효성

북한 벼랑 끝 외교는 성공한 점도 있지만 실패한 점도 있다. 벼랑 끝 외교가 예상

치 못한 역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과 1993~94년 제1차 핵 외교는 북한 벼랑 끝 외교의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이다. 또한 60년대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공세, 70년대 서해사건, 90년대 미사일 외교, 2002년 이후의 제2차 핵 외교도 한정적이지만 성공을 거둔 사례이다. 그러나 90년대 정전체제 무효화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고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및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은 북한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 벼랑 끝 외교의 종합적 평가는
쉽지 않지만 북한이 지불한
비용이 상당히 때문에
‘득을 봤다’고는 할 수 없을 것

북한의 지도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왔지만 그 모든 시도가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국제환경은 북한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고 북한은 공동경

비구역(JSA)의 군사 위기를 외교적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미군 장교 2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전술적 실수에 의해 북한의 시도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1999년 연평해전에서는 북한의 지도부가 한국의 대응을 과소평가 한 결과, 북한은 군사적으로 크게 패하여 많은 인명과 함정을 잃었다.

북한이 감행한 다수의 비정규전도 실패로 끝났다. 4차례에 걸친 한국 대통령 암살 기도는 모두 실패였고 게릴라의 대량 투입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한 결정적으로 1987년의 KAL기 격추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지위는 실추되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합리적이었으나 그들이 전개해 온 벼랑 끝 외교가 항상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의 천재’는 아니었다.

북한의 벼랑 끝 외교의 유효성을 금전적 대차대조표 관점에서 분석하면 어떨까? 핵 외교는 북한에게 나름대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한·미·일을 중심으로 각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을 위해 총 약

25억 달러를 제공하였다. 또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이후 각국은 북한 원조를 위해 4억 3,000만 달러 정도를 지불했다. 북한은 단순 계산으로 2차례에 걸친 핵 외교를 통해 각국으로부터 총 29억 달러 정도의 지원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지불액이 고스란히 북한의 이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KEDO는 경수로 프로젝트에 약16억 달러를 제공했지만 결국 경수로 건설이 완성 전에 중단되었다. 완성되지 않은 경수로의 실질적으로 북한에 아무런 이익을 내지 못한다. 북한이 KEDO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약 4억 달러 상당의 중유뿐이다. 북한이 핵 외교로부터 얻은 실질적 이익의 총액은 여기에 2007년 이후에 받은 중유 등의 지원액을 더하여 8억 달러 정도가 된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에는 일정 비용이 든다. 한국 국방부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플루토늄형 핵 개발을 위해 2억 9,000만~7억 6,4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 견적에 따라 북한의 핵 외교의 비용과 이익을 단순 계산하면 추정 비용을 하위로 책정할 경우, 북한은 최대 5억 달러 정도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위의 추정 비용으로 계산하면 북한이 취한 순이익은 거의 없게 된다.

이상에서 핵 외교의 금전적 대차대조표를 검토했으나 이는 어디까지 비용과 이익의 표면적인 비교이다. 대차대조표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북한 벼랑 끝 외교를 지탱하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의 유지 비용과 벼랑 끝 외교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에 따른 비용도 산정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적 추정이 쉽지는 않지만 거기까지 생각하면 북한이 지불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북한이 벼랑 끝 외교를 통해 ‘득을 봤다’ 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보다 나은 설명을 찾아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북한의 행동 패턴에 대한 기존 설명에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국내 정치에 문제가 있을 때 군사 행동을 일으킨다’ 혹은 ‘북한은 국제적으로 곤경에 빠졌을 때 군사 행동을 일으킨다’는 설명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늘 위화감을 느꼈다. 이 책에서는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설명을 분명히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하에서 그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 국내 정치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국제적 곤경에
처했을 때 군사행동을 일으킨다는
분석은 잘못된 분석**

우선 국내 정치와 군사 행동의 관계에 대해 ‘국내 정치는 북한의 군사 행동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지만 중요한 결정 요인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예를 들어 60년대말 김일성이 군사우선정책 정당화와 김창봉 등의 정적 숙청을 위해 푸에

블로호사건을 이용하고 EC-121 전자정보수집기를 격추시켜 군 장악을 도모하고자 했다. 1976년의 관문점사건은 김정일이 국내의 비판을 무릅쓰고 김일성의 권력 승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90년대의 핵·미사일 외교는 당과 군에서 김정일 지위 공식화를 위한 최종 단계와 시기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리고 1998년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추대’ 되기 직전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국내 정치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 행동을 취해왔다는 견해는 옳지 않다. 사실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이 정적의 숙청에 쫓기고 있던 시기에는 북한의 대외적 군사 행동이 저조했지만 60년대 김일성의 권력 기반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군사 행동이 활발해졌다. 또한 80년대 아웅산 테러를 비롯한 일련의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은 김정일이 정식으로 북한의 2인자로 등장하고 대외 공작 기관의 책임자가 되고 난 뒤의 일이었다. 즉, 북한은 국내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 문제가 해결 된 뒤에 활발한 군사 행동을 전개해 온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군사 행동은 종종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마이너스효과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외교적으로 대실패였고 1999년 연평해전은 북한 해군의 일방적인 패배였다. 비정규 활동인 아웅산 테러나 KAL기 폭파사건 역시 대실패였고 이들 사건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지위는 완전히 실추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 정치적 이득을 가져왔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북한은 국제적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군사 행동을 일으킨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분석이다. 북한은 국제환경에 관계없이 군사 행동을 취해 왔다. 1993년과 2002년 핵 외교가 개시되었을 때 북한이 극히 힘든 국제환경에 직면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0년대 후반 북한의 활발했던 군사 행동의 국제환경적 배경에는 중소 대립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발을 담그려 하는 북한에게 유리한 환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70년대의 판문점사건 역시 국제사회, 그 중에서도 특히 유엔에서의 북한에 대한 지지가 높은, 북한에게 매우 유리한 국제환경 속에서 발생했다. 더욱이 90년대 말의 미사일 외교는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관여 정책 추진에 합의하는 바람직한 환경 가운데 시작되었고 1999년 연평해전은 미국의 페리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 대북 참여 방침을 전한 직후에 발생한 것이다.

국제환경의 좋고 나쁨이 북한의 벼랑 끝 외교의 성패를 결정지은 것은 없었다. 매우 양호한 국제환경 하에서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대실패로 끝났지만 최악의 국제환경 속에서 추진된 제1차 핵 외교는 북한에게 자랑스러운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외에도 NLL의 법적 지위 문제에는 일반적 인식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NLL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한국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실제적 NLL은 한미 양국의 함정 및 항공기가 초계 활동을 실시하는 가운데 북방 한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북한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조차 없다. 이러한 사실은 NLL의 명칭이 ‘남방 한계선(SLL)’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만 봐도 분명하지만 의외

로 이와 같은 간단한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NLL을 둘러싼 논의는 북한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이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북한이 서해에서 군사 활동을 극히 집요하게 지속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한국의 대북투쟁사

북한의 벼랑 끝 외교의 역사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한국의 대북투쟁사이기도 하다. 한국은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 행위로 인해 많은 인적·물적 희생을 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대응해

한국의 대북투쟁사는 아직까지
북한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했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군사균형 측면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이르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방위노력이 성공했음을 의미

왔다. 물론 장기적인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군사 균형 측면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이르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방위 노력이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60년대 한국은 DMZ에서의 북한 군사 공세에 대해 방위 태세 강화를 도모하였다. 한국은 북한의 침공 작전에 대항하기 위해 감시 초소와 검문소 방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DMZ의 나무 울타리를 체인 링크 울타리로 교체했다. 또한 청와대습격사건으로 한국은 250만 명을 보유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였고 독자적 방위 산업 육성에 착수하였다.

1970년대 한국은 서해에서의 북한 군사 행동에 대항하여 서해5도의 요새화를 결정하고 현지에 제6해병여단을 창설하여 군사 시설을 건설하고 대포를 배치하였다. 대

공 능력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서해5도 부근에 북한의 항공침입이 감소하였다. 이렇게 서해5도는 취약한 낙도 군에서 전방을 지키는 군사 요새로 변모하였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함정 등에 대항하기 위한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였다. 70년대 한국 해군은 미사일 고속정(PKMM), 초계함(PGM), 고속정(PKM) 등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NLL의 법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를 군사력으로 사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 결과로 1990년대에는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의 우위가 명확해졌다. 1997년 DMZ총포격전에서 한국측 부상자는 없었지만 북한측 사상자가 발생했다. 박격포와 무반동포를 사용하는 북한에 대해 한국측이 강력한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을 압도한 것이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측이 우리측 공세적 대응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또한 1999년 연평해전에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한국에 크게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한국이 배치한 고속정 8척과 ‘천안’을 포함한 초계함 2척은 20밀리 발칸포, 40밀리 기관포, 그리고 76밀리 속사포 등 총 4,584발의 총포탄을 발사하여 경비정과 어뢰정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해군을 압도하여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2002년에는 한국의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침몰되었고 2010년에는 천안함이 북한의 특수 공작 잠수함에 의해 격침되기도 하였다. 이는 모두 연평해전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역으로 말하면 북한이 이러한 기습 공격이 아니면 자신들이 한국군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결코 북한으로부터 계속 당한 것도 아니다. DMZ에서 북한의 공격이 활발했던 1966년 10월, 30여명의 한국군 부대가 북한 지역에 침입·습격하여 북한측에 약 30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후에도 한국은 2,400명의 정예군을 보유한 특수 부대를 결성하고 1968년까지 월 2회 정도 북한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다. 특히 1967년 10~12월에는 11번이나 공격을 시도했는데 그 중 11월의 공격에서는 12명으로 구성된 한국의 특수 부대가 북한의 육군사단사령부를 파괴하고 한 명의 희생자도 내지 않은 상태로 귀

환하기도 있다. 이진삼 전육군참모총장의 증언에 따르면 1969년에 그가 한국측으로 돌아선 북한 게릴라 3명을 이끌고 서부 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침투해 북한군 병사 13명을 사살하였고 그 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침입하여 북한군 병사 20명을 사살했다고 한다. 또한 연평해전 훨씬 이전인 1975년에도 NLL을 넘어 온 북한 어선이 한국의 구축함과 충돌하자 이를 침몰시켰다. 또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1996년에 상어급 잠수함이 한국의 동해안에 좌초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김영삼대통령이 원산에 있는 북한의 잠수함 기지에 대한 공습을 검토하였다고 한다. 한국은 억제적 성격을 띄고 있지만 결코 소극적이지는 않았다.

북한의 벼랑 끝 외교의 역사는 한국의 국방정책 역사이기도 하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일본인인 저자는 ‘만약 일본이 이처럼 어려운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한국만큼 확고하게, 그러나 억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하였다. 건국 이래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한국을 지켜 온 한국군, 그리고 한국 국민의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한다.

두 가지 교훈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로 부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먼저 북한 지도부와 벼랑 끝 외교의 변화를, 다음으로 핵을 둘러싼 합의 방식에 대해 사건을 서술하고 이 글을 매듭지으려 한다.

북한은 많은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어 벼랑 끝 외교를 점차 세련되게 변화시켰다. 90년대 이후의 벼랑 끝 외교는 매우 치밀하게 계산되어 교묘히 실행되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정일은 합리적이고 그의 행동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지만 김정은은 비이성적이고 예측 불가하다’는 평가가 나타난다.

그러나 ‘김정일은 합리적이지만 김정은은 비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70년대에 김일성의 후계자가 된 김정일은 일본인 납치를 지시하고 80년대에는 아웅산 테러와 KAL기 폭파사건을 일으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평가를 결정적으로 실추시켰다. 연평해전에 대한 보복의 측면이 있었다고는 해도 2010년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50명의 한국인을 살해한 것도 김정일이다.金正은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활발하게 진행

하고는 있지만 외국인을 다수 살해하는 만행은 저지르지 않았다. 장성택의 처형 등 국내 숙청이 있었지만 1976년 김동규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일 시대 이후에도 숙청 사건이 있었다. 김정은의 행

한국은 적절한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행동을
비교하고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며
북한과의 대화 합의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 더 나은 합의를
만들어 가는 태도가 필수

동이 눈에 띄는 것은 김정일시대부터 북한 행동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상론만으로 김정은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앞으로 적절한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행동과 김정은의 행동을 비교하고 (이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을 둘러싼 합의의 자세에 대해서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김정은의 평가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핵 합의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합의는 모두 무의미하다’ ‘북한은 항상 약속을 어겼고 우리는 계속해서 속아왔다’는 평가가 종종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분명히 잘못되었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영변의 5MW 원자로 운전을 8년간 중단했고 2007년 합의 후에도 6~7년간 같은 원자로 운전을 정지하였다. 물론 북한이 모든 핵 개발을 동결하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동안 플루토늄의 축적은 저지되었다.

더욱이 합의 비용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제네바합의는 미·일을 중심으로 각국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을 위해 총 약 25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러나 2007년의 합의에서 6차회담 참가국이 부담 한 비용의 총액은 약 4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2007년 합의가 경수로 제공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비용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합의는 제네바 합의와 같은 정도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제네바합의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기 쉬운 합의였다. 제네바합의에서는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북한에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결정됐다. 반대로 말하면 경수로가 완성하지 않는 한 북한은 자국의 핵 시설을 유지하면서 중유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끔 된 것이다. 이를 보면 북한이 경수로 건설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북한과의 모든 합의 내용과 그 결과가 결코 일정하지 않다.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도 과거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 더 나은 합의를 만들어가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를 역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한 이 책이 향후 대북 정책을 고려하는데 참고가 된다면 저자로서 가장 큰 기쁨이다.

〈참고문헌〉

미치시타 나루시게,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1966~2013년』,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KINU

통일+

정세와 쟁점 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 전망

정구연 |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북한의 핵전력 평가

정성윤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북한의 핵보유와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

김상기 |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해외 한반도 연구동향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1966~2013년

미치시타 나루시게 |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교수

국제 정세와 한반도 통일: 과거와 현재

S.O. 쿠르바노프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교수

서평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유지될 것인가?

박재적 |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교수

수행적 관점에서 본 호모 소비에트쿠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